

페미니즘 비하에 일베까지...광주비엔날레 홍보 잇단 논란

‘페미 전파도구 의심...감독 필요’ 댓글에 유튜브 관리자측 ‘하트’ 눌러 누리꾼들 “사과하라” 등 논란 일자 영상 비공개로...광주시는 수사 의뢰 홈페이지 팝업창에 일베 손모양과 유사한 이미지 올렸다가 물의 빛자 삭제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를 두고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비엔나 소시지를 활용해 광주비엔날레를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에 달린 페미니즘을 비하하는 댓글에 ‘하트’를 남기고, 광주비엔날레가 홈페이지 팝업창에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를 인증하는 손모양과 유사한 그림을 집어 넣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유튜브 채널인 ‘빛튜브’에 올린 광주비엔날레 홍보 영상의 댓글에 하트가 달린 것에 대해 대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3일 광주비엔날레 홍보 영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비엔나 소시지’ 영상에 “비엔날레가 페미니즘 사상 전파 도구로 쓰였다는 의심이 든다. 시민들의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문제는 이 댓글에 관리자 측이 하트를 남겼다는 것이다. 하트는 댓글의 내용이 좋다는 뜻으로 채널 관리자만 남길 수 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100개가 넘는 댓글 중 광주시 공식 채널이 이 댓글에만 좋아요를 눌렀다’는 글을 트위터에 업로드 하면서 SNS에서 논란이 됐다. 이 트위터는 30일 기준 21만여명이 읽고 3200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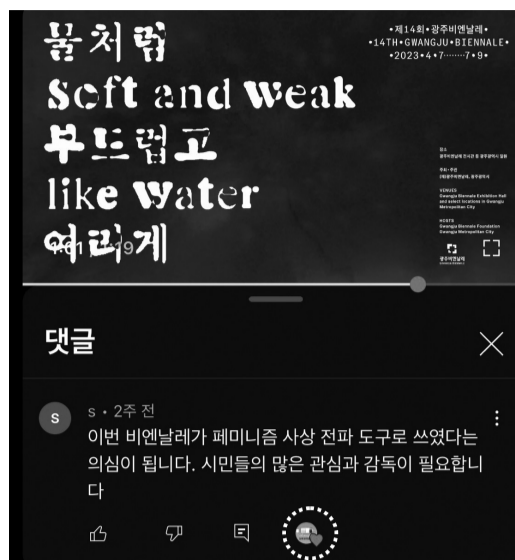
‘리트윗’되고 있다. 트위터 누리꾼들은 ‘비엔날레 작품 중 여성의 해방과 인권 등에 대해 다룬 것도 있는데 당장 사과하라’고 비판하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해명하라’면서 광주비엔날레 공식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

광주시도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새벽 이 댓글에 하트를 누른 것을 발견하고 다음날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비엔나 소시지’가 광주비엔날레와 연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을 때도 내리지 않았던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 댓글 뿐 아니라 ‘공식 채널 운영자는 극우편대인 것 같다’는 댓글에도 하트가 달린 것을 발견하고 경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튜브’는 광주시 유튜브 담당자 한명과 위탁업체가 관리하지만, 양측 모두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찾아내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방침이다.

대전에 있는 위탁업체는 올해 처음 광주시와 계약을 맺었으며 업체 내 사업 담당자와 채널 모니터링 담당자 두명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영업체 담당자는 전면 교체된 상태다.



페미니즘을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에 하트(점선 원안)가 달려 있다. <광주시 빛튜브 채널 캡처>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팝업창에 사용된 이미지(왼쪽)가 일베 인증 손모양으로 논란이 되자 삭제됐다.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팝업창 캡처>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팝업창에 사용된 이미지(왼쪽)가 일베 인증 손모양으로 논란이 되자 삭제됐다.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팝업창 캡처>

광주시는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맡기고 영상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공개 상태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빛튜브 관리 담당자는 “비엔날레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추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앞서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배너에 들어간 삽화가 일베 인증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4월 9일부터 비엔날레 홈페이지

에 ‘많이 하는 질문 모음’ 팝업창에 여성이 손가락을 뒤집어 오른쪽 눈에 대고 있는 그림을 넣었다.

하지만 이 그림과 관련해 ‘일베 인증 손모양’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확산됐다. 일베 인증 손모양은 엄지와 검지를 동그렇게 말아 일베의 자음을 표현한 손동작으로 비슷한 손모양을 사용하면 항상 논란이 되곤 했다.

5만 4000여명이 가입한 문화-예술 전문 블로그에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일베 논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해당 제스처는 팝업 내용과 전혀 무관한 제스처이며 더욱이 광주

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비엔날레 측에 항의전화가 잇따르자 게시 4일만에 팝업창에서 그림을 삭제했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첨부된 아이코는 무료 제작 사이트 첫번째에 게시된 것을 사용한 것일 뿐, 일베 인증이라는 의식을 하지 못했고 일베 로고와 완전히 다르다”면서 “민원이 들어와 불필요한 논쟁이나 논란의 여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상무소각장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각하에 14개 아파트 주민들 반발...집단행동 예고

‘상무소각장’ 폐쇄 후 완충지역 활용 방안과 관련해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14개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다가 각하당하자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회와 상무지구아파트협의회는 지난 26일 상무지구 14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300여장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자보에는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폐쇄 후 활용방안 8차 TF위원회 합의 결과를 어겼는데, 감사원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지 5년이 경과해 청구 기한을 넘겼다는 광주시 감사실 답변을 인용하며 감사도 실시하지 않고 각하시켰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들은 31일에는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 100여장을 상무지구 14개 아파트와 광주시청 인근 등에 부착할 방침이다. 나아가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20년 11월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옛 상무소각장 부지 동측 나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학교시설 등 공공기관을 건립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했는데,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별다른 협의도 없이 이 곳

에 공공임대아파트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것이다.

더불어 상무지구 단체들은 상무소각장 준공당시 아파트 세대별로 부담하게 부과시킨 환경개선부담금 80억원을 반환할 것, 소각장 인근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한 계획이 무산되면서 인근 14개 아파트에 발생한 개별 난방(도시가스)비용 손실액 400여억원을 소급해 지급할 것 등도 요구했다.

상무지구 단체들은 지난해 11월에 감사원에 광주시에 대한 감사 청구를 했으나, 지난 1월 각하당했다. 감사 청구 내용에 환경개선부담금 80억원 반환 등 사안까지 포함하는 바람에 감사원 업무처리 규정상 청구 기한인 5년을 넘겨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상무지구 단체들은 지난 2020년 11월 광주시 등이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부분에 한해 감사원에 감사 재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형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회 위원장은 “지난해 감사 청구 당시 하루만에 3000여명의 서명이 모일 만큼 주민들은 광주시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주민과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광주시의 부당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딸기 수확 체험 신기해요

‘오메지산딸기’ 수확 현장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30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에 있는 딸기 집하장에서 직접 따 딸기를 들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선고...직위 유지

선거 후 담배 성격의 식사를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김성 장흥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태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군수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군수는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전·현직 장흥군의회 모임인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받았다.

김 군수는 전현직 군의원들에 대한 식사 제공은 의정 활동의 일환이며 관행일 뿐이라며 기부행위가 아니며 식사 금액도 소액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뒤 당선 축하 또는 낙선 위로, 그 밖의 답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식사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유죄”라면서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해당 행위가 당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를 적은 청첩장을 뿌린 김 군수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중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재부장 kykim@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